

창문없는 고시원 사라진다... 스프링클러도 의무화

서울시, 노후고시원 종합대책 '서울형고시원' 주거기준 마련 '국일고시원' 참사 되풀이 차단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지난해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 고시원이 1061곳이나 된다.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먼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추진된다.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그동안 200여개 이상의 고시원에 34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아직 간이 스프링클러도 없는 고시원이 많다"며

다. 시는 해당 사업에 전년 대비 2.4배 늘어난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노후 고시원 70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설치비 지원 조건인 '입실료 동결'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최재준 서울시 건축안전제도팀장은 "국일고시원 사고 이후 구청을 통해 280여곳의 고시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며 "예전에는 경쟁이 없었는데 올해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약 1000곳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또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고시원의 실태는 4~9㎡(1~3평)이었다. 면적(창문 없는 방) 비율이 74%에 달하는 고시원도 있었다. 시

는 고시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이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현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설치 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시는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해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에 빨래방, 샤워실, 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선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노랑진 고시촌을 시범 사업지로 검토 중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세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시세 80% 임

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기존 3개층 330㎡ 이하에서 4개층 66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1인당 월 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공지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회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방안 검토



총 12.59km 대상 구체적 방안 논의 광진·성동·송파, 협의체 구성키로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15일 박 시장과 지하철 2호선 지하화의 필요성 및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상구간인 한양대역~잠실역 분선 9.02km와 지선 구간인 성수역~신당역 3.57km 등 총 12.59km의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이 해당 지역의 우울한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핵심 정책 연구과제로 착수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와 성동구, 송파구는 서울시와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은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지역 주민의 지하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광진구는 지난 1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잠실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김현정 기자



한 달간 배출가스 집중단속

18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날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CCTV' 서울 자동차도로 11곳 '봄맞이 대청소' 실시

폭언·의료사고 방지일할 설치

한국투자증권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도 추가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 보안성 검토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 정책 중 하나로,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앞둔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의사사회가 강력한 반발 등 극심한 반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운영해 호응이 큰 수술실CCTV. /경기도

에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의사사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자격자 수술행위,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 자동차도로 11곳 '봄맞이 대청소' 실시

서울시는 내달 26일까지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1곳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뿌려진 염화칼슘과 봄철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하루 평균 70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청소할 예정이다.

청소가 실시되는 곳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다.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이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이지운 서울시시설공단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우수정책에 교부금 600억 지원

정책공모2019 개편안 마련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추진계획'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시상 시군을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최종 순위 결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이다.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

억 원까지, 모두 14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책공모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대규모 3건, 일반규모 7건 등 본선 진출 총 10개 팀에 최대 100억 원, 최소 45억 원을 지급했던 기존 방식을, 대규모 4건, 일반규모 10건 등 14개 팀에 최고 100억 원, 최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시·군 수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SH, 아파트관리 노하우 알려준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아파트 모집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0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전체 입주자의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은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김현정 기자